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김미경 (일본 히로시마 시립대학교
-히로시마 평화연구소 부교수)

1945년 8월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1946년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제정된 평화헌법은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의 경험적,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지난 60여 년간 일본인들은 강한 반전정서와 평화의 나라 일본이라는 아이덴티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북한발 안보위협을 배경으로 일반여론은 점점 더 강경보수화되는 성향을 보여준다.

보수적인 자민당 정권에 연이은 민주당 정권도 북한의 위협을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정책적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적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2009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미일 핵밀약설의 진상과 일본의 원자력 기술 수출노력과 핵연료 재처리 등의 정황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 및 불안정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목 차

1. 안보맥락과 역사적 맥락
2. 반핵평화주의의 제도적 장치
 - 가. 비핵 3원칙
 - 나. 미일 핵밀약설에 관한 진실
3. 일본의 핵 비확산(NPT) 노력
4. 일본 NPT 레짐의 모순
 - 가. 경제적 이익추구
 - 나. 우라늄 과잉재생산
 - 다. 북핵 상황에 대한 일본의 반응
 - 라. 일본의 반핵평화주의를 평화운동으로 재정의할 필요
5. 일본의 향후 정책 전망
 - 가. 법적인 관점
 - 나. 기술적인 관점
 - 다. 국내여론의 보수화추세
 - 라. 군사력 증가추세
 - 마. 중국의 반응
 - 바. 천안함과 센카쿠 영토분쟁 이후의 움직임

1. 안보맥락과 역사적 맥락

- 2010년 9월 일중 간의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島) 영유권 분쟁은 단순한 영토분쟁 이상의 청일전쟁(189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의 체결배경과 미국-구소련의 대립구도형성 과정, 냉전의 종식(1991)에 따른 지역패권 재편 등의 역사적 배경을 깔고 전개된 상황임.
- 센카쿠(尖閣)열도 사태에 대한 중국정부와 2010년 10월 현재 사천성 등을 포함한 대규모 반일 시위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인들의 과민반응은 지난 ‘100년간의 역사적 수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중국의 저변정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정확한 분석을 하기 어려움.¹⁾
-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지역에서 현재 일본이 진행 중인 영토분쟁들(러시아와의 북방영토분쟁, 한국과의 독도분쟁, 중국과의 남지나해 분쟁)은 깨끗이 청산되지 않은 과거 제국주의의 산물과 식민지시대 동안 점령했던 과거영토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일본의 주요 비교대상지역인 유럽대륙과 미국대륙에 대한 경쟁의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 중일 사이의 ‘기(氣)싸움’의 형태로 나타난 최근의 영토분쟁은 양국 간의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경쟁의 한 단면이기에 독도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중일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치안보상황의 이해, 분석 그리고 전망이 역사적 맥을 짚지 않은 현재주의의 관점만으로는 정확한 정책입안이 어렵다는 판단임.
- 이런 맥락에서 현재상황의 분석과 이해에 유의미한 일본의 근대사를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함.
- 반핵평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19세기 식민팽창주의와 일본의 대응
 - 1868년: 메이지유신 (서양식 근대화의 기반마련)
 - 1876년: 강화도조약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 불평등조약)

1) 마이니치신문, 2010년 10월 18일자

- 1894-5년: 제1중일전쟁 (중국에 대한 열등감 극복, 아시아에서의 입지강화)
-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명시)
- 반핵평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전쟁의 20세기와 일본의 대응
 - 1902년: 영일동맹 (탈아시아 정책의 본격적 발현)
 - 1904-5년: 러일전쟁 (서양에 대한 열등감극복, 센카쿠 열도 등 영유권 침탈)
 - 1910년: 한일강제합병 (독도영유권 등을 포함한 대한제국의 국권침탈)
 - 1912년: 메이지천황 사망 (타이쇼시대 시작)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참가 (서양식 제국주의정책 본격가동)
 - 1915년: 중국에 21개조 요구 (청 제국에 대해 영토권, 재산권 주장)
 -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6천명 이상 피살)
 - 1926년: 타이쇼천황 사망 (쇼와시대 시작)
- 반핵평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2): 전쟁의 20세기와 일본의 대응
 - 1931년: 만주사변 (중국침략의 발판마련)
 -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 (미영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반발)
 - 1940년: 독일, 이태리와 군사동맹
 - 1941년: 태평양 전쟁, 러일 중립조약체결 (진주만공격으로 촉발)
 - 1945년 8월 9일: 러시아 중립포기, 대일본 선전포고
 -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Enola Gay기에서 Little Boy 투하)
 -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B-29 Bockscar기에서 Fat Man 투하)
 - 1945년 8월 15일: 일본무조건항복 (포츠담선언, 연합군 점령)
- 히로시마: 반핵평화주의 상징
 - 원자폭탄투하는 인류역사상 전대미문의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는 전례를 남기고 히로시마 시는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의 도덕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함.

최근의 영토분쟁은
양국 간의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경쟁의
한 단면이기에
독도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중일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표 1>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시의 원폭피해²⁾

| | 전체사상자 | | 한국인 사상자 | | | | | |
|------|---------|---------|---------|--------|--------|--------|-------|-------|
| | 피해자 | (즉사) | 피해자 | (즉사) | 생존자 | 귀국자 | 일본 거주 | 한국 거주 |
| 히로시마 | 420,000 | 159,283 | 50,000 | 30,000 | 20,000 | 15,000 | 5,000 | |
| 나가사키 | 271,500 | 73,884 | 20,000 | 10,000 | 10,000 | 8,000 | 2,000 | |
| 전체 | 691,500 | | 70,000 | 40,000 | 30,000 | 23,000 | 7,000 | 2,650 |

사토내각(1964-72년)

이후의 정권들은
핵밀약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부정,
비핵 3원칙 준수를
천명하고 있음

2. 반핵평화주의의 제도적 장치

- 1957년 국방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에 따라 전수방위(헌법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 군사 대국이 되지 않을 것, 비핵 3원칙 준수, 무력에 대한 문민통제 확보를 기조로 확립함.³⁾
- 평화헌법(1946년 11월 3일), 제9조 제2장 전쟁의 전력보유 및 교전권의 포기조항⁴⁾
 -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그 이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비핵 3원칙

- 1957년 미군 원자력부대의 일본 주둔을 거부한 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이 1967년 12월 11일 핵의 비생산, 비소유, 비도입의 비핵 3원칙을 발표하고 그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 사토내각(1964-72년) 이후의 정권들은 핵밀약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부정, 비핵 3원칙 준수를 천명하고 있음. 2010년 8월 6일 칸나오토 수상은 히로시마 평화 기념식 연설에서 비핵 3원칙의 준수를 천명하고 곧 이은 기자회견에선 미국핵우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본 안보현실의 딜레마를 노정시킴.⁵⁾
- 일본정부는 영토 내 미국 측에 의한 핵 반입의 가능성에 대하여“사전협의를 없었으므로 핵 반입도 없었다”는 공식적 입장을 견지하고 미국정부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출처: 한국인 원폭피해자 협회, 2008년 6월 17일 팩스자료. 정확한 원폭피해자의 수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일본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한인 피해자의 수도 히로시마의 경우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다양함 (http://en.wikipedia.org/wiki/Atomic_bombings_of_Hiroshima_and_Nagasaki).

3)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http://law.mod.go.jp>), 2010년 10월 1일 접속

4) 일본 전자정부 홈페이지 (<http://law.egov.go.jp>), 2010년 10월 1일 접속

5) 휴코쿠 신문, 2010년 8월 6일자

- 일본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다음과 같음:
 - 핵 반입시 사전협의를 필요.
 - 지금까지 한번도 사전협의를 없었으므로 핵이 반입된 적이 없음.
 - 사전협의를 있다면 거부할 방침.

나. 미일 핵밀약설에 관한 진실

- 1981년 라이샤워 전 주일미국대사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일 양국의 이해 하에 핵무기 탑재 미 군함이 일본 기지 내에 기항 중”이라고 발언함.
- 1999년, 1963년 당시 라이샤워 주일 미 대사와 오히라 외무대신 사이의 ‘일본 내 미군기지에 핵무기 반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미국 무성과 미 대사관 자료가 발견됨.
- 2008년 11월 9일, NHK방송이 한국전 중 핵무기를 탑재한 해군항모 USS Oriskany가 요코스카 항에 기항했다는 사실을 보도함.
- 2009년 6월 1일, 교도통신과 지방지가 밀약설을 보도한 후 익명의 전 외무성 차관이 밀약의 존재를 확인함. 하지만 당시 나카소네 히로부미 외상은 이를 부인함.
- 2009년 11월, 당시 하토야마 내각의 오키타 외상이 밝힌 미일 4개항의 핵밀약의 내용
 - 1960년 1월: 미·일 안보조약 개정 시 핵 반입에 관한 밀약
 - 1960년 1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공동작전수행에 관한 밀약
 -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상 당시, 유사시 일본영내에 핵 반입에 관한 밀약
 -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상 당시 원상회복보상비를 일본이 부담한다는 밀약
- 2010년 3월호 *Foreign Affairs*지에 라이샤워 전 주일 미 대사의 특별보좌관이었던 George R. Packard씨가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66년,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핵무기를 3개월 간 보관했다고 주장함.

일본 정부의 공식적
비핵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일 간에는
핵밀약이 존재

1970년 2월, 핵 비확산
조약을 서명하고
1976년 6월 핵 비확산
조약을 비준 후,
일본은 NPT의 당위론적
기본정책노선을 추구,
국제적 핵군축,
비확산을 목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을 중심으로
하는 NPT체제를 지향함

-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의 2010년 3월 30일 NHK 방송중의 발언은 “수상 재직 시 외무부로부터 문서상으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일간의] 관행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 핵이 영토 내에 있다는 사실과 미국 핵의 영해통과도 묵인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비핵 3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관행을 굳이 입 밖으로 낼 필요는 없다. 이것이 정치의 지혜다. 일본의 안전보장을 담보 받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3. 일본의 핵 비확산(NPT) 노력

- 핵 비확산 조약(Non Proliferation Treaty):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5개 핵보유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핵 보유를 금지하는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⁶⁾ (1963년 유엔논의/1968년 62개국 조인/ 1970년 발효 2008년 12월 현재, 190국이 체결)
- 1970년 2월, 핵 비확산 조약을 서명하고 1976년 6월 핵 비확산 조약을 비준한 일본은 NPT의 당위론적 기본정책노선을 추구하여 국제적 핵군축, 비확산을 목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중심으로 하는 NPT체제를 지향함.
- 국제사회에서 기울인 노력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음:
 - 1995년 NPT회의에서 호주와 함께 “중동지역비핵화”의 목표를 적극 추진함.
 - 2009년 4월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에서의 “핵 없는 세상” 연설에 적극 동참하는 오바마조리티(Obamajority=Obama+Majority) 캠페인을 히로시마시가 동년 8월에 시작함.
 - 2010년 5월 NPT재검토 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총장과 IAEA 아마노 유키야의 모두(慕頭)연설.

6) 2010년 10월 5일, “21세기 핵 도전과 대응(Nuclear Challenges and Responses in the 21st Century),” 외교안보연구원 국제회의, 모하메드 엘조카니 주한 이집트 대사의 발제와 토론

4. 일본 NPT 레짐의 모순

가. 경제적 이익추구

- NPT 비조인국과 CTBT 비서명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과 경제관계를 지속하여 핵 비확산 문제와 경제 분야를 분리하는 성향을 보임.
- 인도와 원자력협력회의를 지속중인데 현재 뉴델리 정부는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상태임.
- 인도의 농축우라늄 계획을 저지한다는 유엔의 입장은 지지하는 동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체결을 위한 협이는 진행 중임.
- 만약 일본과 인도의 원자력협정이 체결되고, 인도의 핵실험이 진행 된다면, 핵 비보유국으로 핵무기제조 기술이 이전되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짐.

나. 우라늄 과잉재생산

- 현재 세계적으로 250톤의 민수용 우라늄이 비축된 상태임.
- 미국, 한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 일본,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재처리를 고집(중국과 인도도 곧 재처리 할 방침)하고 있기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NPT 레짐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일본, 중국 사이의 역학변동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심리적 군비경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과 인도의
원자력협정이 체결되고,
인도의 핵실험이
진행된다면,
핵 비보유국으로
핵무기제조 기술이
이전되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짐*

다. 북핵 상황에 대한 일본의 반응

- 다음과 같이 북핵 상황의 일지를 요약, 정리함.
 - 1992년 2월 19일: 한반도비핵화 선언(핵무기개발금지, 평화로운 목

우라늄 과잉재생산 및
북한, 일본, 중국 사이의
역학변동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심리적 군비경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 적의 핵에너지 사용, 핵 재처리/우라늄농축금지)
- 1992-3년: IAEA현장조사과정에서 의문점 발견
- 1993년: NPT 탈퇴 (제1차 북핵 위기)
-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핵시설 동결, 경수로원자로의 완성 시 기존시설철거, 북미관계 정상화)
-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창설
- 2002년: 김정일 - 코이즈미 평양회담
- 2003년: NPT 탈퇴 선언
- 2005년: 핵보유 발표하고 KEDO는 해체당함
- 2006년: 미사일 발사 (제1차 핵실험)
- 2009년: 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

○ 일본의 대응

- 미일 미사일공동개발참여: 1980년 레이건 행정부의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일명 Star Wars) 정책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미사일 방어체제 개발에 참여
-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후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섬
- 2003년 12월 9일: 내각은 “탄두미사일방어시스템 도입”을 결정
- 2005년: 이를 위해 “무기 수출에 관한 3가지 원칙에 관한 법령”을 개정
- 2007년 12월: 콩고호에서 발사된 1,000킬로 중단거리 에이지스 대미사일 방어시스템 실험성공
- 2008년 1월 4일: 콩고호를 나가사키 현 사세보시 소재 항공 자위 부대에 배치
- 현재: 에이지스 대미사일 방어시스템과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패트리엇 방어시스템을 개발 중 (Patriot Advanced Capabilities-3, or PAC-3)
- 2008년 9월: PAC-3 미국 뉴멕시코 실험성공
- 2008년 11월: 뉴 에이지스 대미사일 방어시스템 실험 실패
- 2010년 3월: 미사일 방어 (MD)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III탑재 이지스함을 모두 4척으로 늘리고 지휘통제와 통신체제 강화를 목표로 경제관제 레이더(FPS) 구축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

라. 일본의 반핵평화주의를 평화운동으로 재정의할 필요

- 이데올로기인 이념이 필수적으로 가져야하는 불변의 전제를 제시하지 못함.
- 일본의 반핵평화주의는 불변의 도덕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철학적 사조라기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일종의 정치사회운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반핵평화주의를 주도할만한 철학에 기반을 둔 도덕적 리더십을 갖지 못함.
- 일본의 수사학적 이상주의와 현실적 정책행태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분석한 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음.

5. 일본의 향후 정책 전망

가. 법적인 관점

- 평화헌법 개정의 움직임: 현재 평화헌법 9조에 의하면 미국을 포함한 제3국의 방위를 포함한 집단 방위적 군사행동은 금지됨.
- 2009년 8월 발표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보고서’는 상기 ‘국방의 기본방침’이 지난 50년 동안 수정되지 않아 일본의 현실적 안전보장정책을 결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 ‘문민통제’ 및 ‘군사대국이 되지 않음’은 여전히 중요하나 세계안보환경의 변화로 현재는 기존 ‘전수방위’의 상황과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일본 방위성은 일본이 주권독립국이기 때문에 헌법 제9조는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또한 방위성은 ‘보유할 수 있는 자기방위 능력은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이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자위능력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수준인지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 일본 헌법 제9조상 인정되는 ‘자위권의 발동 요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일본에 급박하고 정당하지 못한 침해가 있을 것, 이와 같은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 필요최소한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임.

*일본의 반핵
평화주의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일종의
정치사회운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반핵평화주의를
주도할만한 철학에
기반을 둔 도덕적
리더십을 갖지 못함*

**2009년 8월 발표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문민통제' 및
'군사대국이 되지 않음'은
여전히 중요하나
세계안보환경의 변화로
현재는 기존
'전수방위'의 상황과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함**

- 2009년 8월 발행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위를 위해 기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수정하여 요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기술적인 관점

- 현재까지는 대공방어미사일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
- 미일 양국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SM-3 Block II A을 개발 중임.
-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헌법상의 제약이 있음.
- 또한 고도로 통제된 상황에서 성공한 실험이 실제상황에서 성공할 확률은 무척 낮음.
- 마지막으로 실제상황 전 궤도나 발사 장소나 시간 등의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불가능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임.

다. 국내여론의 보수화추세

- 아직까지는 반전평화중심의 여론이 대세임.
- 하지만 일련의 북한발 도발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여론도 강경화되는 추세임.
 - 2006 내각처 여론조사: 56.5% 미사일 방어를 지지
 - 2006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 60% 미사일 방어를 지지
- 반대여론의 대부분은 높은 개발비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꼽음.(2010년까지 74억 달러~89억 달러 정도의 예산이 들 전망)

라. 군사력 증가추세⁷⁾

- 2007년 1월 방위청은 방위대로 승격됨.

7) 2009, 2010년판 일본방위백서

- 2009-2010년 일본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육군은 13.8만에서 14.3만으로 증가했고, 해군보유 군함 톤수는 34.5만 톤에서 44.9만 톤으로 증가함.
- 육상자위대: 90전차 등 대부분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를 보유, AH-64D 등 항공기는 미국 무기체계를 보유함.
- 해상자위대: 이지스함(6척)을 비롯한 첨단 무기체계 보유함.(세계 2위 수준)
- 항공자위대: F-15(22대), 조기경계관제기(E-767/4대)를 비롯한 미국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자국에서 개량한 F-2항공기를 보유함.
- 미일 연합 소해훈련이 2010년 7월 14일~16일 동안 츠가루해협외 무츠만 일대에서 거행됨.

마. 중국의 반응

- 중국은 미일 공동미사일 방어능력프로그램으로 인해
 - 대중국 핵 억지력이 증가하고
 -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의 길이 열리고
 - 대만의 저항력이 증가하고
 - 동아시아의 무기경쟁이 가속화됨을 우려
 - 따라서 지역 내의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을 우려
 - 결국 일본의 미사일 개발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위를 위해 기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수정하여 요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는 대공방어미사일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반전평화중심의 여론이 대세임

<표 2> 일본 및 동북아 주요국 국방비 (단위: 억 달러)⁸⁾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순위 |
|-----|-------|-------|-------|-------|-------|----|
| 일본 | 443.3 | 451.4 | 456.6 | 398 | 463 | 7 |
| 미국 | 4,365 | 4,439 | 5,287 | 5,489 | 6,007 | 1 |
| 중국 | 250.4 | 295 | 495 | 434 | 849 | 2 |
| 러시아 | 136 | 198 | 347 | 316 | 586 | 5 |

8) 출처: 스톡홀름평화연구소(2009연감).

**중국의 공세적
부상(aggressive
rising)으로 동아시아
내부 역학관계의
변화를 초래해 일본의
방위, 안보체제에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공세적 부상(aggressive rising)으로 동아시아 내부 역학관계의 변화를 초래해 일본의 방위, 안보체제에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바. 천안함과 센카쿠 영토분쟁 이후의 움직임

○ 국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러시아와의 해상 훈련 마찰, 천안함 사태로 고취된 안보경각심의 여론으로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2010년 9월 23일 미일 외교장관 회담 시 미국은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힘. 미 국방부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함. 미일 양국의 ‘중국의 공세적 부상에 대한 경계’라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양국관계의 구심점이 될 전망에 의해 중국의 부상과 평시작전개념 강화의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6월 30일~7월 10일 동안 중국 해군이 저장성 저우산(舟山)에서 타이저우(台州) 동쪽 연안 해역에서 해상훈련 실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과 프리깃함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宮古島)사이 공해를 항해하는 것을 자위대 호위함 ‘기리사메(霧雨)’가 포착함.⁹⁾

○ 2010년 들어 관찰되는 중국(남중국해 및 조어도) 및 러시아(북방영토)와의 긴장관계를 방위계획대강(防衛計畵の大綱)¹⁰⁾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음.

기획 및 감수: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길효(제주평화연구원 인턴)

9) 매일경제, 2010.7.26자.

10) 방위계획대강(防衛計畵の大綱)은 일본의 국방정책의 기본적 방침.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각의에서 결정되며 2010년 말 개정될 예정.

JPI 정책포럼 현황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 손기용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 (2010년 9월)
- 이선진 『중국의 대미안마 전략』 (2010년 9월)
- 최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2010년 9월)
- 전진호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 (2010년 8월)
- 정성장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2010년 8월)
- 최명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2010년 8월)
- 김재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2010년 7월)
- 이성우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2010년 7월)
- 이애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2010년 7월)
- 안병민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 (2010년 6월)
- 서상문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 (2010년 6월)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2010년 6월)

- 권태진 『북한의 식량위기: 배경 및 전망』 (2010년 5월)
- 오경택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2010년 5월)
-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2010년 5월)
- 전성훈 『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 (2010년 4월)
- 김석수 『해적과 해양안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중심으로』 (2010년 4월)
- 유달승 『이란의 권력구도와 정치운동 및 핵 문제』 (2010년 4월)
- 조동호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2010년 3월)
- 이영훈 『북한 경제난의 현황 및 전망』 (2010년 3월)
- 이선진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2010년 3월)
- 문홍호 『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 (2010년 2월)
- 조성렬 『한반도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과 향후 전망』 (2010년 2월)
- 이종서 『EU의 대북정책의 특징: 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 (2010년 1월)
- 박병광 『최근의 중국 군사력 발전 현황과 합의』 (2010년 1월)
- 송화섭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 (2010년 1월)
- 고주현 『ARTE TV 정책형성 과정과 한중일 공동채널의 가능성 모색』 (2009년 12월)
- 김강일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 (2009년 12월)
- 윤이숙 『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2009년 12월)

- 김영희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2009년 12월)
- 박원화 『항공 안전: 국제 및 국내법적 대처』 (2009년 12월)
- 고봉준 『동북아의 ‘조용한’ 군비경쟁과 북핵(미사일) 실험』
(2009년 12월)
- 조윤영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2009년 12월)
- 최장근 『일본 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2009년 12월)
- 이춘근 『우주 개발: 쟁점과 전망』 (2009년 11월)
- 주장환 『중국의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의 전망』
(2009년 11월)
- 조양현 『한·중·일 3국 협력의 현황 및 전망』 (2009년 10월)
- 황지환 『북한의 최근 대내외 인식과 정책방향』 (2009년 10월)
- 조 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전망』 (2009년 10월)
- 이성우 『북한의 인권현황과 한국의 인권외교정책』
(2009년 10월)
- 최원기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한국에의 함의』
(2009년 9월)
- 박영준 『일본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2009년 9월)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을 계기로』 (2009년 8월)
- Belashov Volodymyr 『우크라이나 비핵화 모델』 (2009년 7월)
- 이재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과제: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을 중심으로』 (2009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